

코로나 n차 감염 재확산 우려 '초비상'

지난 4일부터 해장국·어린이집 관련 확진 9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도 확진... 누적 537명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n차 감염이 확산하며 사흘 만에 코로나 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연말연시 사우나, 카페 관련 연쇄 감염이 빈번한 이후 다시 시작된 n차 감염이 우려되며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6일 사흘 간 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음식점과 인근 어린이집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다.

528·529번 확진자는 가족으로,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자 진

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시 아라동 소재 태진해장국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공개했다. 또 아라동 소재 인에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을 파악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및 전수검사 결과 태진해장국과 어린이집 관련 지난 5~6일 사이 7명(530~536번)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530~534번 확진자는 모두 528·52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

돼 지난 5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530·531·532·534번 확진자는 529번과 가족 관계이며, 533번 확진자는 528·529번의 지인으로 이들의 자택에 방문해 2시간 가량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35·536번 확진자는 인에어린이집 전수검사 과정에서 각각 지난 5일,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중 확진자 1명이 아라동 소재 꼬마도깨비어린이집 원아인 것을 추가로 확인, 관계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5~6일 간 코로나19 관련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태진해장국, 어린이집과 관련해 이들 간 604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가운데

태진해장국과 관련해선 지난 5일 동선공개 이후 338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인에어린이집 및 꼬마도깨비어린이집과 관련해선 26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원아 3·교사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537번 확진자는 서울 양천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5일 입도했다.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양천구 소재 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받았다. 이후 코로나19 검사 및 시설격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7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7일 오후 5시 기준 2월 한 달 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명,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37명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동백꽃서 꿀따는 꿀벌. 봄같은 포근한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6일 서귀포시 표선읍 한 주택에 만개한 동백꽃을 찾은 꿀벌들이 꿀을 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원 지사, 오늘 국회 찾아 4·3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원회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8일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이날 방문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 위원장 등도 동행한다. 원회룡 지사는 이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제1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생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4·3특별법 개정안 마침표 찍나

작년 11월 이후 두 달 여만에 오늘 법안소위 상정
 당정 합의로 논의 탄력 전망 속 논쟁 재연 우려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8일) 법안 처리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여 만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수정형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강화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당정청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핵심 쟁점이 되어온 보상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으로 수정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 합의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 속에 일각에서는 진상 조사 관련 조항을 두고 여야의 논쟁

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여·야당에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를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동의·부동의 의견을 의뢰했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외국인도 백신 접종... 연말까지 40만여명 목표

18세 이상 외국인 2만명 포함

제주 거주 외국인도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을 발표하면서 1차 접종 목표 인원 발표 때에는 외국인 인구를 제외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제주도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정확한 외국인 수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69만7578명 중 40만 25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는 당초 접종 목표 인원을 47만 2245명으로 추산해 발표했지만, 목표치를 이번에 40만 2580명으로 조정했다.

도는 접종 대상에 18세 이상 외국인 2만566명(지난해말 기준)도 포함시켰다. 1차 접종 목표 인원 발표 때에는 외국인 인구를 제외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제주도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정확한 외국인 수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도전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20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에는 제2의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U PROVINCE DEVELOPMENT CO.